

문 13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무부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 관리대상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주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등은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감모(減耗)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주무부장관이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, 규격,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,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비축물자의 품목·규격·수량·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.

### 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4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ㄴ.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맞추어 기본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협의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- ㄷ.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.
- ㄹ. 시·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·도계획을 작성하여 시·도협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,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- 문 15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·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·장비 또는 물자의 점검 주기·방법 및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명하거나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동행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른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
- 문 16. 민방위기본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<보기>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 (단,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)

29세 여성 甲은 2013. 3. 2. A 산업대학에 입학하였고, 2020. 12. 19. 현재 B 리(里)에 주소를 두고 있다. 甲은 지역사회에 전염병의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에서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기 위해 2020. 12. 19.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하였다.

— <보 기> —

- ㄱ.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A 산업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, 지역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.
- ㄴ. B 리의 이장 乙은 甲이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건강상 이유로 더는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 활동하기 힘들다고 판단한다면, 직권으로 甲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.
- ㄷ. 甲이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주소지인 B 리에서 그 구역 외에 있는 C 리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, B 리의 이장 乙의 승인을 받아야 甲은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
- ① ㄱ
- ② ㄴ
- ③ ㄴ, ㄷ
- ④ ㄱ, ㄴ, ㄷ

문 17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둔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.
- ② 민방위기술�지원대는 재난대책에 관한 민방위 업무를 수행할 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읍·면·동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둘 이상의 통·리 민방위대를 지역 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직장 민방위 대장은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·해체·이전 또는 명의를 변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문 18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민방위대의 기술 및 기능 요원은 연 10일,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, 이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ㄴ.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은 직접 교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- ㄷ. 민방위대요원에 대한 전지(轉地)교육은 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ㄹ. 교육훈련 대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
- 문 19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의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·면·동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.
  - ②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을 정하여진 시간 내에 동원하기 위하여 확정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.
  - ③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관혼상제를 이유로 동원을 미루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, 동원 명령자는 직권으로 동원을 미룰 수는 없다.
  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문 20. 민방위기본법령상 보상 및 실비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이미 지급한 장애 보상금과 무관하게 법정 사망 보상금 전액을 사망 보상금으로 지급한다.
  - ②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국가가 부담한다.
  - ③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·숙박료·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④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의 날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는 재해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.
- 문 21. 민방위기본법령상 응급조치 및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읍·면·동장은 등화의 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.
  - ② 민방위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제거 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
  - ③ 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에 대해 시설의 소개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.
  - ④ 등화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문 22. 甲은 A 시 B 동에 소재하면서 乙을 직장의 장으로 하는 직장민방위대의 대원이다.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(O)과 옳지 않은 것(X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ㄱ. 甲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는 B 동장이 전달하며, 직접 교부하는 경우 甲이 없으면 같은 세대 안의 가족 중 성인자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.
- ㄴ. 甲이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, A 시장은 직권으로 甲의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.
- ㄷ.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甲이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치료신청서를 乙을 거쳐 A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ㄹ. 사용자 乙이 甲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된 기간을 휴무로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

|   | <u>ㄱ</u> | <u>ㄴ</u> | <u>ㄷ</u> | <u>ㄹ</u>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① | X        | O        | X        | O        |
| ② | O        | X        | O        | X        |
| ③ | X        | X        | O        | O        |
| ④ | X        | X        | X        | X        |

문 23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「통합방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갑종사태, 을종사태, 병종사태의 통합 방위사태
- ②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 기능의 수행에 지장이 있어 시·도지사가 정하는 사태
- ③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
- ④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

